

국민 대통합 — 탕평책 쓰면 실패한다

박근혜 새정부 대한민국의 진로와 과제

선거를 치르면서 「통합(統合)」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의 화두(話頭)처럼 되었다. 너도 나도 통합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모두 통합을 말한다. 심지어 여당도 야당도 한결같이 통합을 부르짖는다.

도대체 투표를 하면 국민의 의견은 두 쪽이든 세 쪽이든 나뉘지게 되어 있다. 투표결과 어느 한 의견을 채택한다 해도 나뉜 의견은 나뉜 대로 있는 것이다. 아무리 다수의 의견을 택했다 해도 소수의 의견은 소수의견대로 상존(常存)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민주주의 하는 나라의 「정상」이다. 이때의 「정상」은 어디든 일정하게 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의 정상(定常)이고 그것이 옳다거나 바르다거나 제대로 된 상태라는 의미의 정상(正常)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군주제나 전체주의처럼 하나로 합침을 전제로 한 사상이 아니고, 여러개로 나뉘짐을 전제로 한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합(合)」의 정치사상 정치제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분(分)」 정치사상 정치제도다. 사회든 개인이든 여러개로 나뉘지면 싸우는 것이다. 나뉜 만큼 가치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요구가 다르다. 다른 것만큼 자기 것을 더 많이 관찰하기 위해 싸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생래적(生來的)으로 갈등구조다.

민주주의는 만들어질 때부터 싸움하는 사회, 싸움이 구조화된 사회다. 이유는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가 산업화의 정치 사상이며 정치제도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는 제조업을 기본으로 하는 철저한 경쟁구조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지역, 다른 집단, 다른기업과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말이 경쟁(競爭)이지 경쟁이란 「싸움」 하는 것이다. 그 싸움에는 오직 룰(rule)이 있다는 것뿐이고, 그 바탕에는 글자 그대로 다룰 경(競) 다룰 쟁(爭)의 싸움이 기본이다.

우리가 「통합」을 말할 때 우리가 사는 이 민주주의 사회가 그 태생부터 「싸움하는 사회」 - 갈등구조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갈등이 병리현상이 아니라 정상 현상이라고 인식될때 비로소 갈등관리가 된다. 갈등관리는 일어나는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열도를 식히는 것이다. 격화된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그 높아진 갈등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갈등을 없애자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통합을 말 할때 으레 통일을 생각한다. 통합은 통일(統一)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통일은 두 개 혹은 세 개, 네개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개 혹은 세 개 네 개

특별기고



송 복

·분회 회우
·연세대 명예교수

가 가졌던 각개의 정체성(正體性)도 모두 없어지고 오직 하나의 정체성만 남는 것이다. 이른바 영어로 유니피케이션(unification)이다. 반대로 통합은 여러개가 되는 것이다. 몇 개로 나뉘지든 나뉜 상태 그대로 존속해서 각개의 고유성 정체성을 더 강화하고 더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뉜

진 여러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 적응하고 서로 협동해서 결과적으로 「응집된 전체(cohesive whole)」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오직 하나로 합쳐지는 유니피케이션과 정 반대되는 여러개 나뉜 상태에서 응집하는 인테그레이션(integration) 「통합」인 것이다.

통일이 후진국 현상이라면 통합은 선진국 현상이다. 통일이 전근대 사회의 염원이라면, 통합은 현대사회의 비전이다. 「하나가 되자」 「우리 민족끼리」가 통일 주창자의 구호라면 「여러개가 되자」 「세계화 하자」가 통합지향자의 사고며 행태다. 통일은 단일화 획일화이고, 통합은 다원화 다양화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사회 통합의 키워드로 인사 탕평책을 내세운다. 지역 이념 세대 성별을 아우르는 인사기용을 주창한다. 이런 탕평책은 1700년대의 영조시대에도 주창됐고 정조 시대에도 주창됐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내내 똑같이 절규 되었다. 얼마나 기나긴 역사의 탕평책이였는가. 그럼에도 한번이라도 성공해 본 일이 있는가.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듯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지 않았는가.

왜 그러한가, 탕평책은 본질적으로 실패를 안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어떤 유능한 지도자도 절대로 성공시킬수 없는 인사 정책이다. 그것은 소외되고 패배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달래 줄 수는 있다. 탕평한 분노와 사무친 원한을 극히 잠정적으로 회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약효는 길지 않다. 너무나 한계가 분명한 포퓰리즘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영·정조시대나 쓰던 전근대적 포퓰리즘이다. 현대사회의 인사 등용책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탕평책은 통일지향과 지위지향 사회의 유물이다. 둘다 현대사회의 지향(志向)과는 정 반대다. 통일 지향은 앞서 말한대로 「모두 하나가 되자. 한마음으로 뭉치자. 각자의 정체성을 뭉개고 하나의 정체성을 수립하자」의 지향이다. 이 때 부득이 해서 내놓는 정책이 탕평책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세상이 천만번 바뀌어도 결코 그런 시대로 환원될수 없는, 강 저편 언덕으로의 사회지향과 구조를 가진 다양성의 시대며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 다원 - 다양화 살려 나갈 필요 역할 수행 능력 따져 인재 등용해야

2013 정기총회소집 공고

대한언론인회 2013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 시 : 2013년 1월 28일(월) 오후 2시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안 건〉

1. 2012년 결산보고
2. 2013년 사업계획 토의
3. 2013년 예산안 심의
4. 기타

2013년 1월 1일

* 회우 여러분은 참석 여부를 전화로 알려주세요
연락처 전화 732-4798

社団法人大韓言論人會 회장 洪元基

謹賀新年

지난해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健勝하시고 가정에 항상 祝福과 榮光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祈願 합니다

2013년 원단

社団法人大韓言論人會

2013 新年祝詩

신비로와라 우리들의 새아침은

신비로와라 우리들의 새아침은
언제나 새롭다

바람이 없으면
꽃향기가 멀리 가지 못하지만
창의와 의지로 뛰는 가슴은
바람 없이도, 거친 바람 속에서도
팽팽한 도전이다 미래를 응시한다

새벽이슬이 언젠간 바닷물로 살아나듯이
바닷가 모래가 산으로 일어서듯이
꿈 꾸는 세계 큰 그림 그릴 때
삶은 아름다워라 힘있게 뻗어가는 빛



김후란

·본회 회우
·시인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

처음부터 지구는 하나였다
2천 5백억개 별들이 은하계를 이루고
우주에 또 그만한 은하계 무수히 많다고 하면
그토록 광막한 우주에서
그중에도 아주 작은 행성 지구에서
엄청난 인연으로 맺어진 내 가족 내 이웃
자랑스런 내 나라
경이로와라 참으로 눈부셔라

예지의 눈빛으로 새날을 맞자
애뜻한 우리들의 만남 뜨거이 손잡고
새해의 큰 길 힘있게 걸자
소중하게 정겹게
서로를 품자

1면에서 이어집니다.

지위지향은 역할지향과 반대되는 지위점유의 사회지향이다. 어느 사회든 사람들은 사회적 삶에서 지위(자리)나 역할(일)이나,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지위지향은 누가 어느 지위에 앉느냐의 자리를 중시하는 마음가짐(의식지향)이고, 역할지향은 지위보다 그 지위에서 요구되는 역할(일)을 누가 잘 해낼 수 있느냐를 중시하는 마음가짐(의식지향)이다. 역할지향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느냐이다.

탕평책은 정부 주요자리에 지역 이념 세대(性)에 따라 사람을 골고루 안배하는 인사정책이다. 그것은 지위지향이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 전근대적이며 후진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요구 하고 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득권 내려놓아라」라고 소리를 높인다. 기득권은 그 사람이 이미(既) 차지하고 있는(得) 자리(權)다. 그 자리에서 그가 얼마나 역할을 잘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오래 앉았으니 내 놓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대학을 잘 개혁한 총장도 4년이 넘으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자리를 바꾸고자 한다. 대학 교수들까지도 그런 지위지향 의식

이 골수에 박혀있다.

이런 사회지향이며 의식구조에 대통령이 편승하는 한,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나 실패한다. 우리가 어떻게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박정희 시대에 탕평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위지향이 아니라 역할지향을 하고, 통일지향이 아니라 통합지향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화의 영웅 박태준 남덕우 김정렬 오원철 같은 인물이 나왔다. 물론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전두환 시대는 김재익이 있었다. 민주화 이후 상징하는 인물은 고사하고 기억하는 인물이 있느냐. 미상불 이명박 정부는 박재완 장관을 기억 할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탕평책을 쓰지도 못하고 탕평책 의식에만 갇혀 있다가 철저히 실패한 인사 기용이 됐다. 삼성이 어쩌서 삼성이나, 탕평책을 쓰지 않아서 삼성이다.

맹자(孟子)에 입현무방(立賢無方)이라는 말이 있다. 출신성분을 따지지 말고 얼마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느냐, 그 역할수행 능력을 따져 사람을 쓰라는 말이다. 2천년이상 그 글을 읽고도, 우리도 중국도 그대로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살아야 했느냐, 사회통합은 오로지 이 역할 지향의 현대적 인사 등용책을 쓸 때만 가능하다. [국문]

“원로언론인 역할 수행 최선”

신년사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 두루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년 동안 회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로 언론인들이 쓴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제 2권을 출판하여 우리 언론사는 물론 현대사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를 다시 한번 축적했고 본회 고문 이해복 선생 평전 ‘종군기자 사회부장 빛나던 이름’을 발행, 평생을 언론에 몸담아 오신 생생한 자취를 우리 언론사에 귀중한 증언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회우 여러분!

올해는 새로운 정부 탄생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새해에는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비록 현역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사회와 언론계 원로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문제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단체답게 우리 대한언론인회 위상제고와

역량결집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大韓言論’은 원로 언론인들의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우 여러분의 복지와 문화생활을 위해 문화탐방, 영화감상, 건강강좌 등 알찬 행사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우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는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문]

풍요상징 뱀띠해 萬福기원

癸巳年 歲時記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뱀띠해다. 계(癸)는 임(壬)과 같이 검은색을 뜻하므로 흑사의 해, 즉 검은 뱀의 해가 되겠다. 검은 뱀의 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 뱀은 그 생김새 때문에 사람들이 징그러워하고 독이 강해서 두려워하는 동물이다. 또 성경에서 불 때 원죄를 날게 했다고 해서 뱀을 간계, 교활, 유혹의 상징으로 보고 저주의 표적으로 삼기도 한다. 또, 불경 중에서 법화경(法華經) 등에 ‘뱀은 유혹(誘惑)이요 애욕(愛慾)’이라고 했다. 그러나 뱀에 대한 평가는 특히 동양에서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구렁이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용(龍)이 된다고 믿거나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어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특히, 엽구렁이라고 해서 뱀을 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엽은 흔히 집안 살림이 그 덕이나 복으로 늘어가는 것으로 믿고 소중히 여기는 동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로는 구렁이, 두꺼비, 족제비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구렁이가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살림을 늘게 해주는 신을 모시는 단지로서 엽단지를 만들어 뱀을 신으로 모신다. 그 안에는 주로 쌀이나 돈을 넣어둔다. 이처럼 뱀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고대 일본인은 뱀을 조상으로 모셨다. 뱀해에 태어난 유명한 사람들로는 이순신 장군, 문익점, 안익태, 박정희, 정일

권, 김정렬, 윤동주, 이상설 등이 있다.

뱀해의 역사를 보면 1905년 을사(乙巳)년엔 부끄러운 을사조약이 체결됐고 1917년 정사(丁巳)년엔 한강 인도교가 완공(10.17)되어 개통되었고, 춘원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당시 외국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 또 1929(己巳)년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고 여의도와 울산에 비행장이 개장됐다.

그리고 1941(辛巳)년엔 압록강 수풍댐의 수력 발전이 시작되었으며, 중앙선 철도가 개통됐고 12월7일엔 일본군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개시됐다. 1953(癸巳)년엔 새해벽두 부산 국제시장 대화재(火災)로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있

었고, 2월에 화폐개혁, 6월엔 반공포로 석방, 7월27일엔 남북 휴전 협정이 조인돼 3년동안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일단 끝났다.

1965(乙巳)년에는 한국 파월장병 비둘기 부대가 월남에 상륙했고 6월엔 한일 협정이 조인됐다. 1977(丁巳)년엔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1989(己巳)년에 조선왕조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가 별세했다. 2001(辛巳)년엔 21세기가 시작되는 해로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취임했고 9월11일엔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여객기 4대를 납치해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부 등에 충돌시켜 3천여 명이 사망했다. [국문]

이보길 편집위원

통일정책 창조적 새틀을 짜야 한다

박근혜 새정부 대한민국의 진로와 과제

이번 대선에서는 통일정책 논의가 실종되었다. 어느 후보도 조리있게 통일정책을 내세우지 못했다.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 정치 지도자도 국민도 모두 혼란에 빠져서 정작 ‘통일’이 갈 길을 잃었다. 통일이 무엇을 하나로 하는 과업인지, 왜 해야 하는지, 통일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새 세대의 국민들이 통일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하여 정리된 그림이 아직 그려져 있지 않아 어떤 후보도 선뜻 ‘통일정책 구상’을 내어 놓지 못했던 것 같다.

분단 70년 서로 너무 몰라

70년 전 분단직후에는 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다. 통일은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였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단순했다. 분단된 생활공간을 도로 하나로 합치고 정치체제를 단일화하여 분단이 없었던 때로 되돌아가는 것이 통일이었기 때문이다.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지금 우리에게 더 이상 되돌아 갈 수 있는 ‘분단이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에도 북에도 분단이전 상태는 없다. 양쪽 모두에 새로운 정치체제, 사회문화가 자리 잡았고 남북 동포들 대부분도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 서로 잘 모른다. 더구나 그동안 접촉이 없어서 서로가 닮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이제 오직 남은 것은 서로가 같은 뿌리를 가진 동포라는 ‘배워서 알게 된’ 의식뿐이다.

이제 통일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의 상태’, ‘창조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감성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냉철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선택하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차분히 접근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가 되었다.

통일을 神話化하지 말자

그동안 통일정책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같은 민족이니가 무조건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신화화된 정서에 휩쓸려 통일 과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백안시했기 때문이다. 마치 상대방의 생각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옛날 연인이었으니까 당장 결혼하자고 나서는 것과 같다. 통일은 이제부터라도 냉철하게 다루어 나가야 한다. 원점에서부터 통일정책을 차근차근 검토해가면서 ‘창조적 통일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

우선 통일의 목적을 재확인하자. 통일은 무엇을 말하며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 계획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의 대북한 정책’의 일환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 더 성숙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춘 대한민국, 그리고 강하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우리들의 장기 비전과 관련하여 북한 동포도 우리가 만들어갈 위대한 대한민국

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루어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은 ‘확대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일 뿐이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해두면 통일 과제는 분명해진다.

첫째로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주적 국가여야 한다. 통일을 위한다면 더더욱 대한민국

특별기고



이상우

- 본회 회우
- 전 조선일보기자
- 전 한림대총장
- 현 신아시아연구소 소장

南北 기본합의서부터 다시 시작 인내심 갖고 북한 변화 이끌어야

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절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로 통일의 대상은 재북 동포이다. 북한 동포도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풍요, 그리고 정치참여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통일의 목표이므로 재북 동포의 삶의 질의 향상이 통일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북한 동포가 현재 북한에 주권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북한 정권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북한 정권을 통하여서만 재북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순리대로 풀어나가자

어떤 정책도 현실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현실의 개선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 된다.

첫째, 북한 정권이 ‘정상국가’로 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제1단계의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협의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 당사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우리와 100개가 넘는 합의를 했지만 단 한 가지도 지킨 적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와의 협의는 무의미하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북한 정권 지도자들의 환상을 깨주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무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 지도자들은 무력해방의 환상을 버리게 될 것이다.

둘째로, 재북 동포들의 마음을 얻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질서 속에서 살고 싶어 할 때만 가능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 주민들이 부러워할만한 자유롭고 풍요롭고 바른 대한민국을 건설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 주변의 이웃나라들의 지지와 축복을 얻어내야 한다. 통일한국이 이들 이웃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최소한 이들 나라들은 우리의 통일 노력을

제에서 살기로 합의할 때 단일 국가를 만든다는 세 단계 통일정책은 어떤 이름을 붙이든 피할 수 없는 통일정책 틀이 된다.

이러한 틀을 정리해 놓은 것이 ‘한민족공동체안’인데 북한을 설득하여 이안을 수용시켜 합의해 놓은 것이 1991년 12월에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라 부르는 이 합의서 내용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인내를 가지고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정책이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순리대로 풀어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 공동선언>과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비현실적인 환상적 단일 국가를 창설하자는 ‘비현실적인 정치적 문건’이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큰 혼란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파편화시키는 부작용도 낳았다.

새로 시작되는 정부는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되돌아가서 출발점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다시 출발하여 대한민국 주도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펴나가기 바란다. 그것이 돌아가는 길 같지만 바르고 곧은 길이다.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도, 북한 동포를 돕는 인도적 지원 계획도, 그리고 경제교류와 협력의 확대도 모두 이 틀에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새 대통령은 ‘임기 내 통일의 기틀을 잡은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사심(私心)을 버리고 7천만 한민족 전체의 명운을 먼저 생각하는 ‘더디나 바른’ 통일정책을 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늘이 도와 북한을 바로 이해하고 원칙을 소중히 생각하는 박근혜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 ‘빠른 통일보다 바른통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리라 기대한다. [박]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로, 통일의 주체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처음부터 거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단계 통일정책 추진을

1인 지배의 전제주의 전제주의국가인 북한 정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간에는 타협에 의한 통일은 이론상 불가능하다. 두 이념은 상호모순 관계에 있어 부분 양보로 타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자주, 민주, 평화를 통일정책 지침으로 해온 우리로서는 세 단계로 통일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다. 우선 서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고 공존하기로 합의하고 안정화된 공존체제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높여 나가면서 ‘생활양식’의 단일화를 추진해 나가다가 남북한 주민들이 단일 정치체



본회 산악회 송년산행 성황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정운중)는 2012년(임진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산행을 1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근교에 자리한 용마산에서 가졌다.(사진·용마산정상) 서울시와 구리시에 걸쳐 있는 용마산은 삼국

시대의 전략요충지로서 곳곳에 역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고 산행 후 가진 뒤풀이 행사엔 대한언론인회 임원들이 다수 참여해 산악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박]

부패척결-정치개혁 신속해야 한다

박근혜 새정부 대한민국의 진로와 과제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530만 표 차이로 당선됐을 때 이 정부는 노무현정권이 심은 대못들과 그 세력을 하루아침에 뽑듯 기세등등했다. 그러나 임기 중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노무현 시대보다 더 극좌세력과 불법 선동 양태가 비등함을 보게 되었다. 국민과 언론이 떠받친 황금 같은 허니문기간을 자리싸움하느라 허송하고 광우병 불법세력에 놀라 후퇴함으로써 정권초기에 무능하고 허약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런 좌파들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이 승리를 안겨주어 박근혜정부가 탄생하게 됐다.

이런 새 정부의 출발은 전임 이명박 정부를 되돌아보는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병귀신속(兵貴神速)은 삼국지의 조조가 즐겨 쓴 상승(常勝)전법으로 “용병(用兵)은 적이 대응하는 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함이 첫째”라는 것이다. 박근혜당선자가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그 행동과 입법은 국민과 언론이 받쳐줄 때 신속히 해야 한다. 그가 최초 반년 간 잡는 기선(機先)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임기 내내 국정수행의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19대 국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극좌세력과 노조대표들이 포진해있어 임기 내내 새 정부를 무조건 좌초시키려 할 것이다. 이 정부는 간발의 차이로 민주당을 눌렀고 이 결과에 피눈물을 흘리고 승복 못하는 대중이 수없이 널려있다. 그 틈을 이용해 쫓불세력들은 시시때때로 정권의 공권력 의지를 시험하고, 급기야 2008년 같은 쫓불거사를 재현하려 기도할지 모른다. 그때 ‘원칙 지키는 박근혜’ 답게 새 대통령이 보여주는 법치 의지, 결단력, 정직과 지혜에 이 정권의 성공이 달려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에게 던진 ‘대통합’은 이런 점에서 어려운 선택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지역감정, 계층과 세대 간 깊숙이 갈린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박 당선자 아니

라 누구라도 제안해야 할 이 시대의 절대적 과제다. 그런데 통합하자면 법치를 허물고 비상식을 관용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政體), 역사, 안보의 기반을 흔들던 종북 집단과 전교조도 이 통합에 포함되는가? 덕수궁 텐트장의 불법 농성자와 언론의 행패자인 문화방송(MBC) 파업자들까지 포용

특별기고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스스로 공부하고 시민을 접촉해 의원당 연 100여개 법안을 만들어 제안한다. 국민소득은 우리의 2.5배지만 국회의원 월급은 월 5700크로나(약 950만원) 정도며 12년 이상 의원일 경우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매일아침 9시 출근 9시 퇴근하는 등 보통 직장인의 2배 정도 일을 한다고 한다. 국회식당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누리는 만큼 봉공(奉公) 하는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법 안 지키고 일 안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회기 중 노상 의석을 비우고, 중대한 예산심의와 국정감사에는 건성이다. 보좌관은 제 인척과 지인을 마음대로 쓰고 때때로 이들은 국가일보다 자기 선거구 관리에 더 정성을 쏟는다고 한다. 당파와 개인을 위해 국정을 요리하는 자들도 있다. 바쁘게 일하는 기업인들을 수시로 불러 호통을 침으로서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 이들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세종시의 경우를 보라.

박 차기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하든 행복사회를 만들든 국회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 국민을 대리해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배분하는 정치가는 최소한 시장의 보통사람보다 사심(私心) 없고 사려깊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과 제도를 누가 신뢰하고 의지하겠는가. 그렇다면 국민이 자기이익만을 위해 때를 지어 무법으로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새 대통령이 새누리당과 국회의원들이 ‘새정치인’이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 그의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끝으로, 정권의 신뢰를 허무는 것은 권력의 비리다. 역대 정권 치고 ‘인사가 만사,’ ‘친인척 권력비리 근절’을 말하지 않은 정권이 없지만 예외 없이 그 덫에 걸려 말로가 비참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 점에서 제일 자유로울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집단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과거 대원군은 안동김씨 일가 같은 인척 전횡을 근절하고자 친척이 없는 민씨를 고종의 왕비로 삼았지만 나중에 온갖 민씨가 등장하여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가.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해 임기 내내 이른바 ‘친박’의 권력 사유물화를 원천 차단 해야 그의 새 정치와 국민대통합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

국회의원 특권폐지 가장 큰 과업 권력 사유물화 원천부터 차단

하는 것인가?

따라서 박 당선자의 대통합에는 몇 가지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받들고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고 흑색선동과 조작 따위를 하지 않는 집단만을 포용한다는 것 등이다. 썩은 부분과 대통합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부분을 부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없는 무분별한 대통합은 법과 양식(良識)을 믿는 시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종국에 국민을 오히려 분열시키는 통합이 됨을 알아야 한다.

박 당선자의 통합과제 실천에 가장 큰 과업은 아마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것 일게다. 스웨덴은 국민이 높은 세월에 높은 복지를 부담기로 합의한, 국민통합에 가장 성공한 국가다.

이 나라 국회의원은 전용차가 없고 지하철로 출근하며 대중교통비만 국가가 지불해 준다. 개인비서나 보좌관은 없으며 소속 정당 비서의 도움을 받아

서 직접 음식을 날라 보통직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면책특권을 포함하여 어떤 특권도 안 누린다.

이들은 보람 있는 일이고 이를 즐기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고 스스로 특권을 요구함은 부당하다고 믿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른바 ‘통합사회’인 유럽 대부분 국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정도 대우를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조선시대 왕족 같은 특권층이다. 국회의원 특권을 잘 알리는 말 중 하나가 “대학총장, 장관 등 내가 해본 것 중 제일 좋은 것이 국회의원이다”는 어떤 인사의 소회다. 연봉(세비) 1억3796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9915만원, 철도·선박 무료 이용, 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골프장 회원 대우,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려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 의원 한명을 위해 4급 공무원 2명, 5급·7급 4명, 9급 기능직 1명과 인턴 2명 등 9명을 국비로 둔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전60년 안보관 확립 절실

올해로 6·25 전쟁의 포성을 일단 멈추게 한 휴전 협정이 조인 된지 60주년이 된다. 휴전 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냉담한 분위기 속에 UN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스 중장과 북한측 남일(南日)수석대표가 준비된 군사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휴전이 성립된 것이다.

그로부터 60년, 우리는 다시금 이 휴전 협정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당시 전쟁을 도발한 북한군을 반드시 섬멸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한 국국민의 열망에 따라 이 협정 서명을 거부했다. 이승만(李承晩)대통령도 같은 생각에서 휴전을 반대했다. 클라크 UN군사령관은 정전 협정에 서명하고 나서 “나의 군(軍)경력을 통해 이처럼

수치스럽고 하기 싫은 서명을 해본 일이 없었다.” 라고 개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이 정전 협정이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준 협정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안한 협정이라고 판



박기병

·본회 6·25참전 언론인회장
·전 강원민방 사장

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 휴전협정 60주년을 맞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6·25 전쟁은 말 그대로 정전상태에

있는 것이다. 포성이 잠시 멈추고 있을 뿐이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중지된 상태가 60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이 이를 극명하게 대변해 주고 있다.

6·25전쟁은 우리에게 가장 처참하고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안겨 준 비극적인 전쟁이었다. 3년 1개월 남짓한 전쟁기간동안 남북한 인구의 60%인 1800여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산업시설 43% 가옥 63%가 파괴되는 등 전 국토가 초토화 되었으며 전쟁고아 10만명, 전쟁미망인 약 3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이 발생했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정체성 지켜나갈 法治 확립을

박근혜 새정부 대한민국의 진로와 과제

치열한 대선전(大選戰)이 끝났다. 이 제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대한민국 호(號)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특히 국정쇄신을 힘차게 추진해야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국정쇄신의 첫 걸음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국가란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에 의해 규정되고 구별되는데, 공통가치를 결여한 대한민국은 큰 문제를 갖고 있다. 국가정체성을 상실한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는 좌초 위기에 빠져있다. 새로운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첫 번째 순위로 두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한다. 이명박정부의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인식과 정책의 부재(不在)였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해방이후 미국과 UN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이와 함께 확립된 헌법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점차 확립되어가는 발전적인 역사이다. 제헌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하에 사회민주주의의 요소까지 포용한 대단히 선진적인 헌법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아야한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의 의미를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이 의회민주주의와 다당제(多黨制)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立憲主義·법치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와 근대 국민국가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문명사적 의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건국은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건국은 불안전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가를 바르게 조명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한 사회 내에서 사회민주주의부터 시

장지상주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건전한 비판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체(國體)를 부정하는 것엔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심각한 안보위협에는 단결해야 한다. 불신과 증오가 판치는 것은 역대 정부가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여 온 죄과에 따른 업보이기도 하다.

특별기고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 과학대학원 교수
·현대사

야할 때란 것이다.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즉 정치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시민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로서의 시민적 덕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그 사회는 공화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시민사회가 된다.

민주화를 이룬

갖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박탈감, 기회의 불평등, 지역적 소외감을 잘 파악하고 직시해 그들을 위한 효율적 정책을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과 나눔이 상생(相生)하는 정치를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도 국정쇄신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통합진보당의 중복주의는 논외로 친다 해도,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정체성 혼란을 보여준 것은 큰 문제이다. '2013년 체제론' 같은 허무맹랑한 대한민국 부정논리를 모토로 삼고 눈앞의 이익과 승리를 위해 대의를 저버렸다.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부화뇌동(附和雷同)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정신과 정당체계를 가지고 국정쇄신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무작정적인 반대와 폭력을 배제하고 옳은 방향의 정책에 대해선 대승적(大乘的)으로 정부·여당과 함께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대중의 폭력에 편승(便乘)하는 모습도 공당(公黨)으로서 피해야한다.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도 정략적(政略的)인 이유에서 뒤집는 행위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패배시키는 한 원인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완전했던 존재가 아니라, 건국이후 진정한 근대적 국민국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에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국가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기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국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여야는 힘을 합쳐 국정쇄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공통된 대한민국적 가치에 입각한 국정운영일 것이다. [4]

공화주의 기초한 시민사회 지향 건전한 좌파와 협력도 추구해야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현재 좌우를 초월한 공통가치를 못 갖고 방황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제는 정반합(正反合)의 발전과정에서 합을 지향할 때이다.

즉, 과거의 거친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와 현재의 파괴적인 반국가주의를 변증법(辨證法)적으로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합리적 애정을 키워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의 혼선에 대한 해법으로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탈피하고 실제적 공동체를 숙성시키기 위한 공화주의(共和主義)에 주목할 시점이다. 공화주의란 자유, 평등, 공공선(公共善), 그리고 법치(法治)를 그 핵심가치로 한다.

시민적 일체성을 중시하고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특정 공화국의 법, 정치체계, 생활방식에 충성'하는 '공화주의적 애국'의 길을 찾아야한다. 닫힌 민족주의 폐쇄적 국수주의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 공화주의적 애국의 길을 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과잉을 피해나가며 시민사회를 더 알차게 숙성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통일시대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능력위주의 탕평(蕩平)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과거 지역감정의 뿌리가 박정희 정부였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자신을 반대했던 인사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다행히 박근혜 캠프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인재등용 실패를 거울삼아 측근과 패거리 위주의 인재등용을 지양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리고 건전좌파와의 협력과 상생도 마다해선 안 된다. 물론 대한민국 부정(否定)세력과 의 연대는 국정쇄신이나 사회통합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화 시에는 안보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막상 눈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어 버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5마일 최전방 휴전선에서는 우리 군이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적(敵)은 누구인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군인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적은 '서로 싸우거나 해치고자 하는 상대'라고 적시하고 있다.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 언론인회는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올해 6·25 전쟁의 참상을 되돌아보고 안보의식을 드높이는 행사를 국방부와 보훈처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6·25전쟁의 참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회원들의 참전 체험을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또한 6·25전쟁의 전승

지로 알려진 낙동강방어전의 다부동지역 전적지 및 정전 협정을 체결한 판문점 및 임진강 지역 전적지 탐사, 6·25 참전 체험을 통한 안보강연, 6·25참전 언론인 및 종군기자 동판 명패제작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25전쟁에서 희생된 호국영령들이 국군묘지에 잠들어 있다. 이 분들은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 이들에 대한 보훈의 참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4면에서 이어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군은 13만 7천여 명이 전사하고 3만 2천여 명이 실종됐다. UN군의 일원이었던 미군은 5만 4천여 명이 전사, 10만 3천여 명이 부상했고 7천 1백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8천 1백 여명이 실종되는 등 엄청난 인적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피와 눈물로 지킨 것은 바로 자유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상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보게된다. 여기에 햇볕정책의 항수에 젖어 국민들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감상적인 대북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

6·25전쟁은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63년 전에 일어난 것이다. 북한은 정전 협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정위반 도발을 계속 해오고 있다. 정전 협정 체제는 결코 안정된 평화 상태가 아니다.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6·25를 상기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민적인 결의를 다져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여 안보관을 확립, 대비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안보 경제 사회적 가치의 고양이라는 세 가지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보인 것이다. 안보는 나라가 죽고 사는

경제난 극복 태스크포스 구성하라

박근혜 새정부 대한민국의 진로와 과제

국민은 안정 속 변화를 선택했다. 변화와 개혁의 당위성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시대적 명제가 됐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일본의 아베 정부도,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유럽의 그 어떤 정부도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한 위기의식은 물론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안정, 도약이 최우선 과제다. 그렇지만 변화와 개혁이 국민 눈에 불안과 우려의 시각으로 비쳐질 때에는 선택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다. 누구나 변화와 개혁을 외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마음에 상대적으로 더 큰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표 경제공약’은 변화와 개혁을 내걸었어도 불안과 우려보다는 안정 속 기대를 걸어 불안하다는 국민의 선택을 일단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가 국민의 다수 지지로 대통령에 뽑힌 주 요인이라 본다.

대표적인 예가 경제민주화다. 박 후보의 진영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싸고 핵심 참모 간에 서로 다른 의견으로 내부 진통을 겪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박 후보의 결단으로 다소 완화된 내용의 경제민주화가 공약으로 제시됐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연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대기업의 중기사업 영역 침해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 공정위 말고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총수 일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키로 하는 내용이 경제민주화의 골간을 이루고 있

다. 요컨대 재벌의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가하지 않는 대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말하자면 낮은 단계의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내건 두 트랙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요지로 가닥을 잡아 경제공약의 근간을 삼았다. 재벌의 횡포와 경제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상무
·세종대 석좌교수

사회에서 소외된 분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대통합이고 경제민주화이고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어디서 어떻게 성장을 견인할 지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성

경제위기 극복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국민행복이란 최종목표를 이루었으면 한다. 박 당선인은 대선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복지와 지역 개발공약을 제시했다. 일일이 예거하지는 않았지만 당선을 위해 내놓은 약속을 모두 그대로 이행하려고 할 경우 재정면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약속이행을 강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이행 원칙에 철저한 박 당선인이지만 국민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우선순위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

외생변수인 국제경제 여건 뿐 만 아니라 내생변수인 국내경제 여건 또한 지뢰밭이다. 경제민주화, 성장, 민생안정, 국민대통합, 창조경제, 공정거래, 동반성장, 맞춤 복지, 양극화 해소, 중산층 70% 복원 등등 박 당선인이 내세운 키워드는 많고 화려하다. 그러나 관건은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제의 선순환에 달려있다. 역대 정권은 집권 초 ‘작은 정부’를 표방했지만, 한번도 이를 지킨 정부가 없다. 재정긴축과 작은 정부는 여전히 강력하게 지향해야 할 대명제다. 작지만 알뜰한 나라살림에서 국민은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기적만 바라서는 안 될 것이다. 총론에 붙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향후 5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각론으로 만들어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라는 얘기다. 경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존립을 좌우할 대명제다. 국민행복도, 국가존립도 경제에서 나온다. 안보, 복지, 국민통합이 모두 경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18대 대선결과를 보면서 친북 종북 척결의 지름길은 경제에 달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수 국민은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수 진보를 떠나 탈이념화하고 친북 종북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었다. 박근혜 정부 향후 5년의 성패는 결국 경제에 달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B]

대선공약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성장 전인해갈 로드맵 만들어야

력 집중을 바로 잡기위한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명제이긴 해도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에는 모자란다는 생각을 반영한 결과라 본다. 경제민주화만 제대로 하면 경제가 잘 될 것이란 주장에 수정을 가해 성장이란 엔진을 분명히 엮은 셈이다. 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과 한국의 경제부흥을 가리켜 라인강의 기적이니 한강의 기적이니 하지만 경제에 기적이란 없다. 공심인데 콩 나고 팔 심인데 팔이 난 결과일 뿐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결과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 제2의 경제회생 기적을 바란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기업, 국민의 세 경제주체의 합작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박근혜 표 경제공약에 총론은 있어도 각론은 취약하다. 경제민주화도 그렇고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지, 현실 가능해 보이는 구체적인 각론은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 “우리

장둔화, 일본의 장기침체로 세계경제는 지금 위기국면이다. 미국은 여기서 탈피하기 위해 대규모 통화남발과 같은 극약처방마저 불사하고 있다. 유로 존과 일본이 여기에 가세하려는 움직임이다. 경제 선진국들이 저마다 살기위한 위기탈출에 안간힘을 쓰는 형상이다. 미국의 3차에 걸친 막대한 양적 완화(달러화 방출)의 과장으로 미 달러화에 이어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추세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는 앞선 자리에서 올라가 한국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에 빨간 불이 켜져 비상이다. 이명박대통령 정부의 수출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중소대수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로 가도록 하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선언적 경제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반성장이 말처럼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정책이 동반성장과 배치될 경우 정책조율이 관건임은 말할 것도 없다.

국내외의 지난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재외동포선거 존속해야 하나

우리 해외동포 참정권은 2009년 재외국민 참정권법이 통과됨에 따라 영주권자와 상사주재원 유학생, 그리고 일시체류해외 한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런데 이 참정권이 뜻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실은 취지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큰 관심이 없고 둘째 동포사회에서는 재외 영주권자들에게까지 선거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으며 셋째 선거제도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구역이 13개주에 달한다. 캔자스주는 시카고 총영사관과 거리가 1,3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투표권을 행사

하고자 할 경우 유권자가 직접 시카고 총영사관을 찾아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당일 다시 총영사관을 찾아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캔자스에 거주하는 해외동포가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시카고까지 1,300킬로를 두 번 왕복 해야 하니 5,200킬로를 달려야 한다. 이런 투표권을 행사할



김창범

·미국시카고 한인사회
발전협의회 회장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외에도 미중서부 13개주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임시체류 선거권자는 약 8만명에 이른다. 이중 절대다수가 영주권자들이다. 그런데 지난 4·11 총선 때 등록한 유권자는 162명이었다. 이러다 보니 총선 때 소요된 예산이 213억원으로 1인당 투표 비용이 50여 만 원이나 됐

다.

이번 대통령선거 역시 투표율저조는 마찬가지였다. 미국중서부 13개주 유권자 80,022명 중 등록자는 4,178명에 불과 했고 그나마 투표를 한 유권자는 2,948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참정권을 존속해야하는가? 이렇게 비싼 선거를 치르고도 해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었다고 자랑할 것인가? 이것은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해외동포들 간에 갈등이 조성되는 부작용이 조성됐다.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미국 주요 도시에는 예외 없이 이명박 후보 후원회와 정동영 후보 후원회

7면으로 이어집니다.



회우들로 가득찬 2012 송년의 밤 및 고희 회우 축하연 식장.



고학용 회우(오른쪽 첫째)등 고희를 맞은 회우들이 축하금을 받고 있다.

송년의 밤 - 고희회우 축하연 200여 회우 참석 대성황 이뤄

2012년도 대한언론인회 송년모임이 12월 20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흥원기 본회 회장을 비롯, 이해복, 신우식, 제재형 고문과 조창화 명예회장, 본회 임원진 등 2백여 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흥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원로회우를 비롯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언론인회를 적극 성원 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흥 회장은 또 “우리는 비록 현역에서 물러나 있지만 사회와 언론계의 원로로서 자유언론 창달과 언론 산업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하고 “대한언론인회는 원로언론인들을 대표하는 언론단체의 하나로서 자유언론 창달을 위해 회원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정운종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행사는 먼저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제2집 출판에 공이 많은 윤기병 본회 부회장(전 중앙일보 기자·전 정무

1차관)에 대한 공로패 증정과 지난 1년 동안 대한언론인회를 여러모로 지원해 준 언론재단 산업지원팀 정 민 팀장과 안계현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합동 고희연은 올해 만 70세가 된 회우들에게 흥원기 회장이 먼저 금일봉을 전달, 축하했고 32명의 고희 회우를 대표해 고학용(전 조선일보 이사대우 논설위원)회우가 답례인사를 했다. 고학용 회우는 답사를 통해 “대한언론인회가 성대한 잔치를 마련해 줘 고맙다”고 말하고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원로들의 표심을 높이 평가하고 다함께 건강에 유의해 미력이나마 여러면에서 나라의 버팀목이 되자”고 역설했다.

이날 합동고희연에는 특별히 문화일보 이병규 사장이 대형 화환과 금일봉을 보내와 행사를 빛내 주었다. 한편 문화일보 유영학 기획관리국장은 특별히 올해 고희를 맞이한 박석흥(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회우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별도로 증정하는 등 자사 출신 사우들에 대한 배려가 남달랐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송년회는 이승은 여사의 길상소리향 단원들과 경기민요 57호, 이수자 라운주 명창들의 춤과 노랫가락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명창들의 축하무대.

이승은 여사 일행은 이날 경사스러운 때 추는 춤인 ‘입춤’을 선보였고 양산도,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양코르

송으로 ‘배 띄워라’를 열창해 참석 회원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진]

6면에서 이어집니다.

가 있었다. 그런데 선거전이 과열되자 대통령선거인지 영호남 대결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들을 놓아 둔 채 해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생색내기 명분만 찾아야 하는가? 정부와 정치권이 진정으로 해외동포사회에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해외동포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살펴 대안을 찾아보기 바란다.

해외동포들은 정착한 지역에서 하루 빨리 적응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2세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해야한다. 따라서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차라리 2세 교육이나 조상 열이 담겨 있는 ‘뿌리교육’에 전용 할 경우 더 큰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아울러 모국 정치권이나 공직자들은 해외동포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른 이야기에 귀

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우리 해외 거주 동포는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750만명에 이른다. 그래서 이 해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대두돼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실시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었다.

그러다가 1972년 12월 6일 유신헌법 발효와 동시에 폐지됐다. 이후 1977년부터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치개혁 특별법안을 발의, 입법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뒤 해외동포참정권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9년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어떻든 국민현세를 이렇게 쓰고 비싼 선거를 치렀다고 자랑할 것인가? 모국의 정치권이나 공직자들도 해외 동포사회의 현실을 감안, 직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사진]



‘언론, 언론인의 길’ 2집 출판기념회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한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제2집 출판기념회가 예정대로 지난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0여 회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흥원기 회장의 인사말과 윤기병(본회 부회장)간행위원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신우식(전 서울신문사 사장)고문은 필자를 대표해 소회를 피력했고 제재형 고문은 격려사로 간행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흥원기 회장은 “필자 여러분들

이 언론에 종사하면서 높은 기개와 불굴의 의지로 자유언론의 수호를 위해 열정을 쏟으신 장한 기록들은 현직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언론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후진들에게 강한 일깨움으로 받아들여지리라 확신 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출판된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제2집은 작년 제1집(58명 집필)에 이어 원로언론인들이 재직 중에 겪은 보람과 아쉬움 등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올해는 본회 회우 42명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사진]

법조-국방부 넘나든 사회부 기자 ... “삶의 고

朴晉緒

· 전 합
· 전 서
· 아더

인터뷰 : 글·호천웅 (본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54〉

회우초대석

-건강 좋아 보이십니다. 비결이라도?

“1935년에 태어났으니 이제 일흔 아홉이 되네요.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비결이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라고 되물을까 하고 머뭇거리는데 박회우의 이야기보따리가 저절로 풀어졌다.

“저는 요 실패한 기자예요. 좀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어요.” 겸양의 말 같지만 자랑하고 싶은 사연이 많다는 내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귀 기울이며 메모만 열심히 하면 되는 편한 인터뷰로 이어졌다.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있었어요. 신문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지요. 홍익대학교에 처음으로 신문학과가 생겨서 1회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잡지사에서 기자 일을 했죠. 화제 거리를 발굴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잡지사 아르바이트가 인연이 돼서 일간지인 국도신문의 견습 기자가 됐다. 바로 법원과 검찰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기소가 뭔지도 모르고 영장이 뭔지 공판이 뭔지도 모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궁리 끝에 법학교수를 찾아갔다. 사정을 실토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책 한권을 내주며 1주일 동안 암송한 뒤에 테스트를 받자는 것이었다. 그 책이 형사소송법이었다. 1주일간 정말 열심히 읽고 나서 법조출입기자 구실을 했다. 법조 출입 4개월 쯤 됐을 때 거물 법조출입기자인 합동통신의 박남규 기자가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했다. 국도신문 기자에게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 같은 일이었다. 단 조건이 있었다. 6개월간 견습 신분이란 것이었다.

김치열 검사장과의 인연

박 회우는 이때 김치열 서울지검장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된다. 1957년 8월 어느 날, 무척 더웠다. 대법정 입구에서 30대 여인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남편이 싸우는 친구들을 말리다가 한 친구를 밀쳤는데 그만 벽에 부딪쳐 죽었고 과실치사로 구속됐다는 사연이었다. 불쌍히 본 23살의 젊은 기자 박진서는 도와주기로 작심했다. 높은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겠지 하고 검사장 방에 들러 부탁할 게 있다고 했다. 김치열 검사장은 고약한 표정으로 눈을 치뜨고 쳐다보기만 했다. 불쾌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개인적인 청탁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창박을 가리키며 아줌마의 사연을 들려줬다. 그리고 선처를 부탁했다. 김 검사장은 까칠하기로 소문이 나서 기자들도 그를 만나기를 꺼리고 있었다.

김 검사장이 얘기를 들곤 박장대소, 웃어대더니 비로소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는 말을 건넸다. “기자 생활 얼마나 했소?”

박 기자가 “1년이 채 안됐습니다. 높은 분한테 부탁하면 될 줄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말하자 비서를 불러 차를 내오게 하고 훈계를 늘어 놓았다. 김치열 검사장은 30대 후반이었다.

“박 기자 초심을 잃지 마시오.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세요. 기자나 검사나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악의 제거가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 정신 가지고 기자 생활하세요. 그리고 내 방에 자주 놀러오세요.”

이일로 김치열 검사장과 만난 것은 그가 검찰 총장이 되고 법무장관이 된 뒤에도 계속되었다. 인간적으로도 친해져 박회우의 결혼식 주례도 맡았다.

기자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김 검사장의 말은 박 기자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인 청탁은 하지 않겠다는 검사장과 약속을 지켜냈다고 자부한다.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던 그가 한 모임에서 “박 기자, 찢찢매면서 왜 나한테 부탁 안했느냐?”고 농담을 던지던 모습이 가끔 생각난다고 했다. 박 회우는 까다롭고 차가운 반면에 따스한 인간미를 보여준 그가 보고 싶기도 하다. 김 검사장은 치매로 고생하다가 몇



한편의 단편 소설과도 같은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는 박진서 회우.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다 검사장과 인연 ... 인간적 해병 복무중 기자 복귀 ... 日유학 경영 컨설팅 ... 요즘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박 회우를 합동통신으로 스카우트한 박남규 기자가 폐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법조뿐만 아니라 서울 시청과 교통부까지 취재를 떠맡아야 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을 맡게 된 박 회우는 시청과 교통부 기자실을 찾아 고참 기자들에게 경례로 인사드리며 살려달라고 했다.

“저 견습기잡니다. 6개월 못 채우면 잘립니다. 선배님을 살려주십시오.” 모두들 흔쾌히 알았다고 감싸주었다. 그런 박 회우에게 회사는 체육부까지 담당토록했다. 고생을 바가지로 한 시절이었다. 6개월의 수습기간을 견뎌냈고 사회부 기자의 내공을 쌓았다.

1958년 <윤락행위 방지법>을 특종 보도한 일과 <국가보안법 개정안 해설> 기사를 쓴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표를 내라...알았지?

당시 합동통신 보도국의 실세는 김진학 정치부장 겸 편집부국장이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김

진학 부국장이 박 회우를 불렀다. 마감 시간이 2시간 남은 상황이었다. “박 기자 마감 전에 해설 기사를 쓰시오.”

개정내용도 모르는 데 어쩔 수가 없었다. 마감 시간을 넘겼다.

김 부국장의 통고다. “사표를 내시오.” 캄캄했다. 어떻게 해서 사회부기자로 자리를 잡았는데... 기가 막혔다. 퇴근도 못하고 망연자실해 있는 박 회우에게 정치부 조세형 기자가 조언을 주었다. “박 기자, 오늘 밤 취재해서 내일 아침 1편에 신도록 해요.” 고맙기는 했지만 막막하기는 그대로였다.

김치열 검사장이 생각났다.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거 문인구 검사가 손질을 했어요. 문 검사에게 도움을 청해요.”

청파동 문 검사 집으로 찾아갔다. 늦게야 귀가한 문 검사는 잔뜩 취해 있었다. 사정했다. 못쓰면 큰일 난다고...

술김의 문 검사가 법 개정 배경과 골자 그리고 이점과 전망까지 술술 풀어주었다. 다음 날 그 해설이 1편에 실렸고, 각 신문 등이 일제히 받아췄다.

책상을 정리하며 김 부국장의 기색을 살폈다. “사표 내라”는 어제의 통고가 유요한지? 아니면 1편 해설기사로 면제가 됐는지? 퇴근하면서 김 부국장이 부르더니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회사 얘기는 안하고, 목욕탕을 나와서는 명동의 바 3군데를 들렀다. 많이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다. 내일 출근은 해야 하는 건지? 다른 신문사를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술에 취한 김 부국장이 자기 차에 올라타면서 냅다 따귀를 때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한마디 “알았지?” 그리고는 사라졌다.

지금 생각하면 ‘취재가 뭔지 알았지!’ 라는 의미였던 것 같다.

사령관실 쳐들어간 일등병

5·16직후인 1961년 8월 병역미필로 합동통신에 사표를 내고 10월에 해병대에 자원입대 했다. 정훈감실에서 <해병>이란 월간 잡지의 취재를 맡았다. 고등학교 선배가 훈련도 안 받고 사회로 복귀해서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박진서 일병은

비마다 은인 만났어요”

동통신 사회부 기자
울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앤더슨 코리아 대표

(보 편집위원·수필가) 사진 · 정은중 (본회 상임이사)



해병대 사령관실로 무조건 쳐들어갔다. “일병 박진서 사령관 각하께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라고 외쳤다.

사령관실이 뒤집어 졌다. 하사관들에게 끌려나와 주먹세례를 받았다. 그 와중에 비서실장 홍성철 대령(후일 내무부 장관)이 부르더니 “네 정체가 뭐고 할 이야기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전직 신문기자입니다. 제대시켜 주십시오. 한번 해병이면 죽어도 해병인데 밖에서 해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령관 김성은(후일 국방부 장관)중장에게 불려갔다. 그리고 귀가조치가 내려졌다. 박진서 일병은 다시 합동통신사 사회부기자로 복직했으며 출입처로 국방부를 배정받는다. 해병일병이 군 출입기자가 된 것이다. 정례기자 회견 후 김성은 사령관이 박 일병이며 박 기자인 박 회우를 불러 귀엣말로 “이봐! 사고만 치지 말아”라고 당부했다.

일등병 군 출입기자의 특종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군으로 복귀하느냐 민정에 참여하느냐로 고민할 때 박병권 국방장관이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야한다’고 박정희 의장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박 장관으로 부터 직접 듣고 기사를 썼다. 파급이 만만치 않았

로 옮겼으나 계속 국방부 출입 기자였다. 1967년 주월 특파원으로 월남에 종군했고 서울신문 사회부차장과 부장을 거쳐 1973년 논설위원을 마지막으로 언론계를 떠났다. 본의 아닌 필화사건에 연루돼서 였다. 박 회우는 후배기자들에게 기자는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사회공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부단한 자기 노력과 재교육을 통해 재충전으로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신문을 그만 둔 뒤 일본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關西)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1977년 귀국해서 한국경영컨설팅 대표이사, 아더 앤더슨 코리아 대표를 역임했다.

-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복지 기관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10개동을 돌면 충분한 운동이 된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건강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전달되는 대목이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지 않고 다니며 술도 소주 1병 정도는 마셔도 끄떡없다고도 했다. 그러고 보니 박회우의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 인터뷰 내내 진지했던 박회우의 표정이 사모님 얘기를 꺼냈더니 금방 환해졌다.

납치해서 결혼했어요.

-사모님과 결혼 하실 때 얘기 좀...

“26살 때인 1960년, 합동통신에서 법조 출입할 때인데 김포여상 학생들이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어요. 한진희란 여교사가 가방을 날치기 당했어요. 그 가방에 모든 경비가 다 들어 있어 아주 힘든 상황이 됐답니다. 교사 중 한명이 제 친구였어요. 저한테 도움을 청해서 중부경찰서장한테 부탁했더니 바로 찾아 주더군요. 그 뒤로 한진희 선생이 자주 찾아와서 주말 데이트를 즐기곤 했어요.”

-그럼 박 회우께서 청혼하셨나요.

“아니지요. 한 선생이 연락을 끊더라구요. 알아보니 장인어른이 초등학교 교장인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기자한테는 절대로 시집보내지 않겠다고 감금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기가 나더군요. 그래서 바로 지프를 빌려 타고 김포로 가서 한 선생을 납치해왔지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박 회우의 사연은 콩트요 단편소설이며 시트콤의 연속으로 보였다. 그리고 77년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여의도 침례교회 장로인 박 회우는 청년부 교사로 유아 도우미로 봉사활동을 계속했으며 가능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세상 문제에 부딪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고비마다 은인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곤 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 언제나 최선을 다했지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박 회우의 술회(述懷)에는 자금(自矜)이 담겨있었다. [4]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⑪

잠을 잘자야 건강하다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고령자 일수록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 잠은 낮 동안 쌓였던 정신과 신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다음 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활력소이다. 잠을 잘 자야 다음날 몸이 개운하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낸다. 집

중력과 인지기능 저하에서 감정 조절이 힘들어 진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을 주어 뇌출혈과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높인다.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를 비롯한 각종 감염성 질환은 물론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잠이 부족하면 체중이 불어난다는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잠을 짧았을 때처럼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30% 정도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이가 들어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노화에 따른 호르몬과 같은 생리적 변화에서 생활리듬의 변화, 각종 성인병과 퇴행성 질환에 따른 통증 등 다양하다.

고령자는 누운 후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음에 더 잘 깨며 깨는 횟수도 많아진다. 특히 남성 노

인의 경우 전립선비대가 생기면 밤에도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치다. 노인성 우울증이 있으면 새벽에 일찍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수면무호흡증도 늘어나 숙면을 방해한다. 수면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시간당 이러한 현상이 5회를 넘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자면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술을 한잔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잠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수면제와 술로 잠을 청하다보면 약물의 내성과 중독으로 고생할 수 있다.

잠을 잘 자려면 먼저 평소의 생활리듬을 깨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 잠을 설치는 일이 있더라도 다음날 평소처럼 일어나 활동함으로써 수면리듬을 빨리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낮 동안 적당한량의 빛을 쏘이면서 육체적 활동을 통해 몸을 피로한 상태로 만든 후 소음이 적고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등의 수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증세가 심하면 물론 수면클리닉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4]

관계 끝까지 유지 은 봉사활동 전념

고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장관의 말을 전한 것이라서 무사했다.

박병권 장관은 물러나고 후임으로 김성은 사령관이 국방부장관이 됐다. 그리고 박진서 기자가 진짜 대형 필화사건을 일으켰다. 한국군의 장비현황 점검 결과 각종 장비 보급률과 화력 등이 크게 떨어진다는 특종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박 기자는 악명 높던 506방첩대(현 기무사)에 끌려갔다.

밤새도록 교대로 들어오는 6명의 수사관으로부터 기사 출처를 대라는 조사를 받았다. “맞지는 않았지만 열린 문 사이로 들리는 매 맞는 소리와 신음 소리에 온 몸이 오그라드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윤필용 특무부대장이 전화를 했어요. 박형 차 보낼 테니 나한테 오세요.”라고... 또 무사했다.

김성은 국방장관의 배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보도가 결국 미국에 무기와 장비보강을 요청하는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 준 결과가 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박 회우는 1965년 서울신문으



언론진흥재단 언론인 초청 송년음악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지난 12월 13일, 26일 양일간 프레스클럽 회원 및 전현직 언론인들을 초청, 송년음악회를 열었다. 대한언론인회 회원들도 다수 초청된 이날 송년음악회는 새로운 창작곡 악그룹 ‘아나야(ANAYA)’가 신곡과 함께 흥겨운 가락을 선보여 관중을 매료시켰다.

전통 민요와 랩, 가요보컬이 함께 어우러진 아나야의 공연에서는 박종일 작사 작곡의 ‘하루’ 등 9곡으

로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박용갑 김사량의 탭댄스와 영혼을 뒤흔드는 전재덕의 하모니카 공연 등 민요, 랩, 가요 보컬의 목소리가 후렴구를 주고받으며 앙상블을 이뤘다.

‘아나야’는 수백 년을 이어 온 전통민요, 판소리, 굿소리 등 우리의 전통음악 중에서 ‘노래’에 주목한 퓨전국악보컬그룹으로, 아나야라는 말은 봉산탈춤에서 무대를 시작하는 신호구령에서 따 온 것이다. [4]

선관위 주관 대선후보토론 개선돼야

대통령 선거에 관한 방송 얘기를 다시 해야겠다.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이 제 몫을 다 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 보는 것은 올해 방송저널리즘의 결산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지난 10월, 11월호 대한언론 이 난에서 연이어 다루고도 다시 다루려는 까닭이다.

앞서 두 차례의 방송평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방송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나름대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 기구나 팀을 구성하는 등 인력, 시간, 재원을 총동원해서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느라고 노력했다. 국민의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공해 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공정성 시비는 사라져

방송의 이런 노력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거의 없었다는 데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지나친 강박관념(?)은 1분30초 리포트에 여야의 인터뷰를 같이 집어넣는 부자유스런 일도 종종 눈에 띄어 시청자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계적 공정성에 얽매다보니 각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을 점검하고 검증하기보다 행사나 후보의 입만 쳐다보기에 급급해 정책이나 공약의 검증 등 객관적 기준보다 이미지 전달의 피상적 보도에 그쳤다는 점도 수없이 지적된 사항이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보도문제는 수없이 논의돼 온 사항이어서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선거방송 토론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정책과 공약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유권자들은 TV토론을 통해서 후보와 직접 만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토론방송과 후보 등록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 중앙선거관위의 방송 토론은 그 성공적 수행 여부에 대해 방송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겠다. 알다시피 이번에 시행된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 토론은 초청 대상 선정과 토론 진행 방식, 질문, 진행자 선정까지 모두 중앙선거관위가 주관하고 방송사는 다만 기술적인 진행과 중계만 하기 때문에 토론의 모든 책임은 중앙선거관위에 있지만 방송이란 측면에서 선관위 선거 방송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정책검증기회 빼앗아

먼저 토론자 선정 문제다. 원내 의석 5석 이상 정당 후보면 토론 방송에 참가할 수 있어 지지율 1%도 안 되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참가해 1, 2차 토론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펼치는 대신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말로 토론회를 완전히 망쳐 버리고 국민의 대통령 선택 기준 결정을 휘방하고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정책 검증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 더구나 3차 토론 몇 시간 전에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 방식과 질문 내용을 바꿔야 하는 곤란을 겪기도 했다.

누구도 이 후보가 완주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혈세를 27억 원이나 삼키면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방송시평



오건환

- 본회 회우
- 전 KBS 파리총국장
-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거 후보 토론 방송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출연기준 강화 필요

선관위 토론 방송 제도 개선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 보장이란 차원에서 여론조사 3% 이상, 국회의원 5석 이상 정당의 후보는 토론에 참가시키는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

토론자 선정-진행방식 모두 문제 방송사 출구조사 정확도에 의문



선관위 주관 대선후보 토론 장면.

정치적 판단과 후보 선정 기준을 결정하는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횡포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기막힐 뿐이다.

1차 정치, 안보 분야 토론과 2차 경제, 복지 분야는 이정희 후보의 횡포에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나마 토론 직전 이 후보의 사퇴로 3차 토론에서 박근혜, 문재인 양후보가 교육제도 개선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향 등의 주제로 토론과 상호 공방이 진행된 점은 다행이었다.

1차 토론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신경 쓰느라고 진행자 신동호 아나운서가 주제와 토론방식을 무시하고 멋대로 나가는 이정희 후보를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의 하나인데 2차 토론에서 교육효과를 얻은 황상무 진행자가 이 후보의 막무가내를 다소라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발짝 나아갔다고 평할 수 있겠다. 그러나 토론 진행자는 준비된 질문을 읽고 단순히 시간이나 채는 계시원이 돼서는 안 된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이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도도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가이드라인 설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후보 결정 기준을 제시해 주는 대통령 선

다.

미국의 경우 여론조사 15% 이상 지지율 후보로 양자 토론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프랑스는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를 결선투표에 참여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우리도 방송 토론에 참가할 초청 대상자를 여론 지지율 15% 이상 후보, 또는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후보 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토론 방식도 자유토론과 상호토론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패널 참여 등 좀 더 다양한 토론을 통해 정책 검증이 확연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오히려 국민의 판단기준과 선택기준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방송사도 선관위 주관이라는데 얽매이지 말고 진행방법이나 주제와 질문 선정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송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후보 방송 토론의 다른 중요한 축은 공식 선거 운동 전 예비 후보나 정당의 유력 경선 후보 초청 토론이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아쉬운 점의 하나가 16, 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돼 제도화 하다가 되었던 유력 예비 후보

초청 토론회가 퇴행했다는 점이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뤄진 토론회는 선관위 주관 토론회 이전에 한국방송기자클럽과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고 전자는 회원사 공동 생중계로 시청자와 만났고 후자는 종편방송의 생중계가 있었다.

후보 한 명씩 초청해 패널과의 토론으로 진행된 두 토론회는 패널이 각각 방송기자와 클럽 회원으로, 방송기자클럽은 진행자 포함 6명, 관훈클럽은 4명의 패널이 각각 참가했다. 6개 회원사가 모두 패널을 참가시켜야 한다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는 엄격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다가 6명의 패널이 참가하다보니 토론이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흐르기 쉽고 심도 있는 추가질문이 늘 아쉽다는 생각인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부터 내내 문제가 됐던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나 NLL 문제 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토론 평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철수 행보에도 일단의 책임

후보 등록 후 공식 선거 방송 토론이 이정희 후보의 막무가내식 토론으로 제구실을 못했다면 방송사나 다른 언론기관 단체의 자유스런 초청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마도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겠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 등록 직전까지 밀고 당기는 바람에 각 후보 진영에서는 토론에 선뜻 응하지를 못하고 또 경선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가 입후보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무소속 후보와 같은 조건으로 토론할 수 없다는 불공정 주장 때문에 토론회 일정을 잡을 수 없었고 방송사는 토론회 중계 편성을 계속 바꿔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물론 안철수 후보를 과감하게 빼 버리고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만 초청할 수 있어야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토론 참가에 목을 맨 방송사는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KBS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박근혜 후보를 초청해 독자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셈이 됐는데 자칭 국민면접방식으로 진행된 박근혜 후보 초청 토론회는 진행자가 평소와 달리 흥분한 듯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여 초청자까지 긴장을 시켰다는 평이었고 자칭 국민면접관이란 중앙일보의 정진홍 논설위원은 토론 진행 순서를 처음부터 지키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장시간 펴므로써 시작부터 토론 진행을 방해했다.

방송 토론은 후보와 유권자가 방송을 통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토론에 참가하는 패널은 국민면접관이 됐든 아니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 그리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 등을 끌어내 유권자가 후보를 정확히 파악해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

11면으로 이어집니다.

상생 - 통합 - 소통 리더십 한목소리 강조

18대 대선은 여성대통령을 탄생시키며 보수 정당에 연속 승리를 안겨주었다. 박근혜 15,773,128표(51.55%), 문재인 14,692,632표(48.02%). 두 사람 득표가 99.57%에 달했고 강지원 등 군소 무소속 네 후보의 득표율은 128,861표(0.41%)에 불과했다. 우와 좌, 양강의 승패를 가른 것은 안보를 중시한 50대의 몰표로 분석되었다. 신문들은 당선자에 대한 주문과 여야 승패 원인, 정치 개혁 등의 공약 이행, 야당의 쇄신 방안을 사설로 쏟아냈다. 모두 상생과 통합,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3.53%, 108만 표라는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가른 다수결 원리가 두 조각난 민심의 단층을 쉽게 아몰리지 못하리라는 우려에서다.

‘내려놓기’ 리더십 숭선수범 촉구

20일 신문들은 ‘대통합의 상생정치를 기대한다’ (한겨레), ‘박근혜 당선인 겸허하게 온 국민 겨안는 걸로 시작하라’ (조선), ‘박 당선인 국민통합과 위기관리의 거인 되길’ (동아), ‘박 당선인, 통합과 성장으로 국민 행복시대 열어야’ (문화) 한다는 사설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소통하고 경청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한다. 검찰을 개혁하고 방송을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박 당선인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비판을 불식하는 첫 걸음이다. 박 당선인에게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스스로 내려놓는 리더십을 숭선수범하기 바란다. 독재자 박정희가 아니라 육영수가 보여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온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박 당선인에게 가장 절실한 자세는 자신을 지지한 1,600만 국민과 함께 자신의 경쟁자에게 표를 던진 1,500만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들을 진정으로 끌어안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민주적 리더십과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박 당선인 본인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당선인 주변에 바른말을 서슴없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국민통합과 화해는 거의 전적으로 승자의

관용 자세에 달려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정책 운용에서도 야당이 주장해온 정책구상을 폭넓게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공약한 대로 적극적 정치쇄신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 구체적인 실천의 핵심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란 점에서 그 법제화를 위한 대국회 설득과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성장 기조는 새 정부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크고도 시급한 과제다”라고 경제난 국임을 강조했다.

좌우파 다른주장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에 대해 좌·우파지 논조가 엇갈렸다. 19일 한겨레는 “한때 국제적인 찬탄의 대상이었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한 민주주

평화정착 - 대북문제 논조 엇갈려 야당패배 원인 “보수탓”분석 문제

협조가 긴요하다”고 썼다.

동아일보도 ‘朴 당선인, 국민통합과 위기관리의 거인 되길’ 사설에서 “박 당선인이 승자의 독주를 경계하고 반대 세력을 꺼안아야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당선을 위해 애써준 사람들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나 정파를 초월해 국정의 성공을 도울 사람을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일보는 “‘안철수 바람’으로 나타났다듯이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 역시 절실하다. 국회의원들의 특권폐지와 국회 활성화 등 과감한 정치개혁을 실현시켜야 한다.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숭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측근과 친인척·고위공직자 비리척결에 대한 당선인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박 당선인은 통합과 성장이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새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성장동력의 실종이 겹치는 바람에 빚어진 작금의 구조적인 저

의와 인권을 복원하는 일은 다음 정권의 최우선적 과제다. 안보 역시 군사력으로 영토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마땅하다.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한반도 냉전 해소 약속의 진정성을 살펴보면 후보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논리를 펼쳤다. 요즘 국제적 조롱의 대상은 북한의 인권이다. 반면 동아는 “남북 관계 경색의 주원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다. 경색을 풀려면 북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강화 공조는 4강과의 발전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남북 관계는 통일까지 바라보는 긴 안목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조건 없이 대화를 서두르기보다는 북한의 도발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한겨레와 대치되는 논지를 역설했다. 문화는 “종북 등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결연히 맞서 반드시 퇴출시키고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전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대북 문제의 인식이 다를 뿐이다.

野 패인 ‘보수화’ VS ‘입 진보·낡은 틀’

민주당의 패인에 대해 한겨레는 “보수 세력이 장악한 신문과 방송 등 여론지형의 극단적 왜곡, 뿌리 깊은 지역격차와 세대 간 불균형 등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강고한 보수의 나라라는 사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또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변신 실패와 보수화를 원인으로 들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후보선택은 상대적이고 중층적이며 좌우 이분법으로 양단되지 않는다. 야당 지지면 진보, 여당 지지면 보수라는 등식이 아니다.

문화는 21일 ‘민주당, 국민 신뢰 얻자면 친노·종북 결별부터 해야’ 사설에서 “새정치를 실천으로 보여주려는 노력보다는 안철수 전 후보를 이용해 승리하려고 했다. 백낙청·조국·공지영 씨 등 말만 앞세운 ‘입 진보’들로 넘쳐났다. 불안한 역사의식과 낡은 시대감각이 신뢰 상실로 나타났다”며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진보 좌파의 낡은 시대감각과 뒤떨어진 현실 인식은 1970년대 문학 평론가가 40년이 흐른 지금도 ‘2013년 체제’ 운운하며 야권의 선거 지휘부 역할을 했던 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 좌파 진영은 중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진화할 것이냐 아니면 도태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섰다”고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21일 ‘위기의 민주당,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에서 “단일화와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시대가 요구하는 문 후보만의 그 무엇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패인이다. 민주당과 진보세력의 근본적 인식 전환 없이 단순한 새 판짜기나 이합집산은 위기 탈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지리멸렬한 제1야당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좌파 정당의 실패는 좌파 매체를 포함한 전체 좌파 파워의 실패다. 매체들의 증오와 적대적인 논리는 독선을 증폭하면서 좌파 정당의 중도층 외연 확장을 방해했고 패배로 귀결됐다. 좌파 언론은 야당 패배를 사회의 보수화로만 탓할 게 아니다. 자신들의 가치성향이 한껏 높아진 국민 수준과 부합되게 정말 진보적으로 변용되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

10면에서 이어집니다.

도록 해야 하는데 패널이 흥분해서인지 아니면 모처럼의 기회인데 후보보다 자신을 내세워 보겠다는 욕심을 부려 후보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빚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편성에 따라 방송시간을 엄격하게 90분으로 제한한 방송기자클럽의 토론과 비교해 두 시간으로 진행되고 패널리스트 숫자도 1명이 적은 관훈클럽 토론회는 계속된 보충 질문, 융통성 있는 진행으로 상대적으로 유권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좀 더 깊이

있는 검증이 가능했다고 본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방송 토론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논의된 점을 정리해 봤는데 우선 선관위가 하루 빨리 논의된 점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방송계를 포함한 언론계를 비롯해서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토론 초청 대상의 범위와 조건, 토론 횟수, 시간, 운영방법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방송사도 방송협회나 방송기자클럽 등이 주관해서 선거방송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 방송을 비롯한 언론계, 정

당,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보다 효율적인 선거방송이 이뤄져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돼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과반수를 넘기는 비교적 큰 폭의 차이로 당선됐다.

자화자찬과 꼬집기

방송은 어김없이 출구조사를 통해 오차범위 안의 박빙의 박근혜 우세를 예측했는데 오차범위를 훌쩍 넘는 개표 결과를 보여 이번에도 출구조사 결과가

맞았는지의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3사는 출구조사와 자신들만이 개발한 분석기법으로 정확한 예측을 했다는 자화자찬을 개표방송 내내 끼워 넣었고 1.2%의 오차범위에서 박 후보의 우세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3.6%의 표차를 보여 이번에도 출구조사 결과가 틀렸다는 신문의 지적이 계속돼 방송사의 역대 자화자찬과 비슷하게 결과를 예측했다는 일반 국민의 평가 달리 방송을 꼬집으려는 신문이 여전히 대조를 보인 것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4]

딱딱한 삶 세대풍자 신조어 넘친다

경기침체 반영 '푸어(Poor)' 시리즈

신조어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세대 풍자다. 트위터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조어를 모르면 구닥다리취급 받기 일쑤고 젊은이들 대화에도 끼여들 수 없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난과 빈곤을 의미하는 '푸어(poor)' 시리즈는 세대를 초월하여 딱딱해진 삶을 드러냈다. 대학생시절부터 다채로운 스펙을 쌓고 많은 자격증을 가졌으나 취업이 힘든 20~30대는 '스펙 푸어'다.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로 열심히 일 해봤자 생활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면 '워킹 푸어'로 전락한다. 어렵게 직장을 구한 뒤 결혼자금을 대출 받아 결혼하면 신혼의 단꿈에 빠질 새도 없이 '허니문 푸어'가 되어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인다.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찮아 출산과 함께 '베이비 푸어'가 되어 쪼들리는 살림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뒤 이자와 대출금을 갚느라 쪼들리는 '하우스 푸어'는 나라가 걱정할 만큼 심각하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자금을 모아 프랜차이즈 창업에 쏟아 부었다가 '프랜차이즈 푸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등골이 휘면서 노후대비를 제대로 못한 채 황혼인생을 힘겹게 사는 '실버 푸어'는 고령화 사회의 비극이다. 하나의 푸어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푸어'가 장애물이 되어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우리사회의 서글픈 현상이다.

엄마 재력·정보력 자녀 스펙 좌우

식을 줄 모르는 교육열풍을 풍자한 신조어가 지난해는 유난히 많았다. '인강(인터넷 강의)'을 2배 속도로 듣는 습관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의 느린 강의에 속이 터져 '인강증후군'이란 말이 등장했다. 대입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수능, 학생부, 논술을 일컫는 '고3 죽음의 삼각형'에 입학사정관제가 추가돼 '고3 죽음의 사각형'이 됐다.

성적이 아닌 잠재력을 보고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는 '엄마사정관제'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엄마의 재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좌우된다는 얘기다. 학원이 커피전문점에 모여 사교육 정보를 교환하는 어머니는 '카페맘', 경기장까지 따라가 자녀 뒷바라지 해주는 '사커맘'은 못 말리는 현대판 '맹모(孟母)'들이다.

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내던 시절에는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불렀으나 요즘은 부모의 등골을 뺏다하여 '등골탑'이라 부른다. 자식을 해외유학 보내고 마누라는 뒷바라지를 위해 팔려 보낸 뒤 경제적 부담을 안고 홀로 사는 '기러기아빠'는 고전이다.

항공료 아끼느라 가족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아버지는 '펑귄아빠', 가족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학교 현장에서 NIE특강을 하고 있는 필자.

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재력의 소유자는 '독수리아빠'다. 해외 유학 보낼 형편이 못돼 강남에 소형 오피스텔을 얻어 아내와 자식만 강남으로 유학 보낸 아빠는 '참새아빠'라고 조롱한다.

고교생 "힘들어요, 졸려요, 살려주세요"

부모들은 사교육비 대느라 휘청거리고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파김치가 된다. 지난 12월 초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선 후보에게 쓴 편지가 눈길을 끌었다.

"학교와 학원을 쳄바퀴 돌 듯 도는 일상에 새벽 5시30분에 일어나 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학원, 독서실까지 거치면 밤늦게 귀가합니다. 언제나 잠이 부족합니다"

"0교시(정규수업 시간 전 아침 수업)까지 하면서 쉴 시간이 줄고 웃음도 잃었습니다. 제발 살려 주세요"

"자는 학생이 4분의 3이 넘습니다" 고교생들의 호소를 요약하면 "힘들어요, 졸려요, 살려 주세요"이다. NIE 특강을 하다보면 조는 학생들이 많아 강의 주제가 어렵거나 내 강의가 재미없어 그러려니 했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을 겹치기로 받느라 학생들이 지친 탓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듯이 삶의 지혜보다 대입에 필요한 지식습득에 매몰되고 있는 게 우리의 교육풍토다.

사교육비 월평균 134만원...노후위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에듀푸어(Education Poor)' 가구가 부쩍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편인데도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에듀푸어가 전국에 82만4000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자녀를 유치원 이상에 보낸 9가구 중 한 가구 꼴이다.

한 시중은행의 사교육비 지출 조사

결과 유치원은 월평균 89만원, 초등학교 93만원, 중학교 108만원, 고등학교 149만원 등 월평균 134만원을 쓴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에듀 푸어'는 중산층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노후까지 위협한다.

자녀교육은 부모의 의무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지만 가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교육에 올인 하다 보니 빚을 내서까지 사교육에 매달리는가하면, 자녀를 유학 보냈다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정을 주위에서 흔하게 본다. 자식이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도 교육열은 식을 줄 모른다.

사교육 금지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몫

아이들은 사교육에 시달리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대느라 허덕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사교육의 원인인 선행학습을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없애겠다고 공약했으나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과외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통합당도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금지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박 당선자는 이밖에도 유아에 대한 수당 지급, 0~5세 무상보육, 필수 예방접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공약했다. 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을 반값 수준으로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교육 및 보육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44조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실현성 여부는 미지수다. 학교폭력과 자살, 교권 붕괴, 학생들을 이념교육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12·19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 당선된 문용린씨는 학생인권조례 등 '과도현표 혁신교육'에 브레이크를 걸고 '도덕·인성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의 기본 확립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해야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에듀 푸어'로 전락할 염려도 없다. [4]

회우들이 펴낸 新刊

조강환 회우 '세계사에 ... 영웅'

조강환(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회우가 '세계사에 빛나는 한국인, 영웅'이라는 위인전을 펴냈다

"우리나라를 지킨 지도자, 우리 민족을 빛낸 선구자, 세계에 빛나는 우리의 선각자들이 남긴 세계사적 업적과 사상과 교훈을 살펴 그분들의 업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그리고 그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깨우침에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엮어보았다"고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밝히고 있다.

이책은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이 '세계사에 빛나는 한국인' 33인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충실한 전기로 되어있다. 광개토대왕과 을지문덕에서 원효 고선지 강감찬 이항 김



정희 안중근에 이르는 33인의 선정 기준은 저자가 독자적으로 세운 것이다.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역사책에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거나 가르치지 않았던 인물들, 또는 설화 속에 묻혀 있거나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들도 과감하게 영웅의 월계관을 씌워 33인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고운 이정기 김한보 기황후 충선왕 이성량 등이 그들이다.

이 책은 우리가 정사에서 읽는 역사와 TV드라마에서 보는 역사의 중간 쯤에 자리하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자유롭게, 종횡으로 선정한 이 33인의 당당한 이야기는 우리 역사의 대중화에 하나의 물길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제1회 '모범사원상' 시상



경향신문

경향사우회(회장 김명수·사진오른쪽)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12년 경향인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현직에서 고생하는 후배 우수사원을 추천받아 경향사우회가 제정한 '경향신문 모범사원상'을 시상했다.

사진 동아리 첫 전시회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 사진동아리는 지난 12월 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첫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지난 4월 개설된 사진동호회 소속 20여명의 동우들이 조천용동우(본회 회우)의 지도로 그동안 현장촬영해 온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 것이다. 이날 사진 전시회에서 김광희 동우회 회장(본회 회우),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겸 채널 A 회장, 박경석(본회회우) 동우회명예회장, 조천용동우 등은 테이프 커팅을 했다.(사진)

이사진전은 세종홀에서 개막 행사를 가진 뒤 동아일보 충청로 사옥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지난 연말까지 전시했다. 전시회에 출품한 사진 중에는 본회 조천용 회우 외에도 박문두 최희조회우의 사진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사우회 소식

장기호 전 회장에게 기념족자 증정

신아일보

신아일보 사우회(회장 김철호)는 지난 12월 6일 저녁 중구 정동 소재 이팔리아노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졌다. 이날 송년 모임에서는 장기호 전 사우회장의 재임 중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김익진 회우가 쓴 기념 족자를 증정했다.

제재형 본회고문 사우회장 취임

한국일보

한국일보 전직 사우 모임인 한우회는 지난 12월 6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제재형 대한언론인회 고문(사진)을 선임했다. 감사에는 흥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 박실 전 국회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임기는 2년.



윤익한 사우회 회장 취임

헤럴드코리아



윤익한(전 코리아헤럴드 주필·사진) 본회 상담역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헤럴드 사우회 총회에서 제 2기 회장에 선출됐다. 코리아헤럴드에서 편집국장 겸 주필 겸 상무를 역임한 윤회장은 현재 서울 타임즈 회장직도 맡고 있다.

13대 회장에 정근춘 씨 선출

KBS



KBS사우회는 지난 11월 20일 13대 사우회장에 정근춘씨(사진)를 선출했다. 추천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 회장 선출 투표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정근춘씨는 KBS 방송센터 건설단, 올림픽 방송본부 기술위원 등을 거쳐 현재까지 KBS기술인 동우회 회장을 맡아왔다. 감사엔 홍금표 이광수씨가 선출됐다.

최장수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 문화재 된다

김성환(본회 회우)의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 원화(原畵)가 문화재로 등록된다. 근대 만화에 대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되기는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20일 고바우 영감 원화를 비롯해 김용환(1912~1998)의 '토끼와 원숭이' 단행본, 김종래(1927~2001)의 '엄마 찾아 삼만리' 원화 등 근대 만화 작품 3건의 원화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바우 영감은 1950년 이후 '사병만화' '만화신문' '월간희



망' 등에 실리기 시작해 1955년 2월 1일 이후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의 일간지를 거치면서 모두 1만 4,139회가 연재된 한국 최장수 시사만화다. 문화재청은 이런 연재물 중 작가 자신이 소장한 6,496장과 동아일보가 소장한 4,247장을 합친 1만 743장의 원화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원화는 최고급 양지에 묵으로 그렸으며 철장(綴裝), 낱장, 병풍 등의 형태로 보관 중이다. [국문]

한 6,496장과 동아일보가 소장한 4,247장을 합친 1만 743장의 원화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원화는 최고급 양지에 묵으로 그렸으며 철장(綴裝), 낱장, 병풍 등의 형태로 보관 중이다. [국문]

본회 이사회 새해사업계획 등 논의

제133차 이사회가 지난 12월 17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흥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윤기로 최귀조 이사 위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2년도 사업추진 실적보고와 2013년 사업계획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흥원기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대한언론인회가 여러모로 활기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임원진들의 노고와 회원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말하고 2013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몇몇 회우의 의료비 지원과 송년회 및 합동 고회연개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13년도 사업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이날 논의 되어 정기총회에 회부할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은행이자 인하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 요인을 감안해 건축 예산 편성



본회 사무실에서 열린 133차 이사회.

- 실버파이팅 종합 출판(언론재단 지원 예상)
- 못다한 이야기 제3집(언론재단 지원 예상)
- 6·25 참전언론인회 : 6·25 참전 수기 발행(보훈처 혹은 국방부 지원예상)
- 휴전협정 60주년 기념 전적지 시찰(휴전선, 인천 상륙작전지, 다부동 전적지 등)
- 대한언론인회 영문표기 Korea Journalist Society 로 변경
- 27차 정기총회 : 2013년 1월 28일(월) 19층 기자회견장 [국문]

노인건강 최대복병 폐렴
감기 오래가면 조심해야

시베리아 한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는 연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하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추운 날씨에 늘어나는 것은 바로 '감기 환자'다.

감기는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내 환경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엔 감기가 오래가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이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건강 장수의 최대 복병은 폐렴이다. 지난해 병·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가장 흔한 질병은 폐렴이었다. 무려 27만5,000여명에 달했다. 전년보다 5만명 늘어난 수치로, 폐렴 사망률도 15% 늘었다. 고령사회를 맞아 '폐렴 비상사태'라 할 정도로 폐렴이 해마다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노년기 흔한 사망원인

폐렴은 지난 2000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11위(인구 10만 명당 6명 사망)였다. 그러던 것이 2010년부터 6위(10만명

당 17명)로 올라섰다.

암환자나 뇌혈관·심장병 환자 등도 실제적으로는 폐렴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노년기 가장 흔한 직접적 사망 원인이다. 50세 전후 폐렴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3.2명이나 75세 이상에서는 31.7명이다.

무려 100배가량이나 높다. 작년 암 사망률이 143명인 것과 비교하면, 고령자에서는 암보다 무서운 것이 폐렴이다.

폐렴의 예방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폐렴의 30~40%를 차지하는 폐렴구균 예방백신을 맞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접종률은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60~70%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폐렴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의 내성률이 워낙 높아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백신을 맞아 폐렴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

백신맞을 때 주의사항

백신을 맞을 때 주의할것은 폐렴과 독감 백신은 접종 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고 최적의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확인받고 맞는 게 좋다.

"50세 이상부터 폐렴 백신 접종이 권장되고, 65세 이상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권한다.

폐렴 발생 고위험 그룹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 ▲알콜중독자 또는 장기간 흡연자 ▲간경화, 만성 신부전증, 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자 ▲면역력이 감소한 암 환자 등이다.

환자 ▲면역력이 감소한 암 환자 등이다.

최근 안세병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폐렴의 전조인 감기에 걸리게 되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등의 행동을 자주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행동은 목 뼈에 충격을 주게 되고, 이 충격으로 인해 목디스크가 발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평소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생활하고 건강식으로 면역력을 증가시켜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국문]

이보길 건강포럼 간사

회우동정 가나다순

富士山高齡登拝者名簿에 실려



박용운(전 동아일보 사
진담당 부국장)원로회우
= 최근 일본 富士山本
宮淺間大社가 발행한
‘평성24년 富士山高齡
登拝者名簿’에 외국인 최고령자(84
세·2명)중 한명으로 명단이 실렸다.
박 원로회우는 지난 8월 17일부터 21
일까지 일본 후지산(해발 3,776미터)
등반에 도전, 정상에 정복하는 노익장
을 과시했다.

라디오 세상열기 캠페인



이원창(한국방송광고공
사 이사장)회우=종교 지
역 라디오 등 중소라디
오 방송 활성화를 위해
기독교 방송 불교방송
경인방송 등 9개 라디오 방송사와 공
동으로 라디오 세상열기 캠페인을 전
개한다.

자랑스런 졸업생상 받아



장두원회우= 최근 김제
금구초등학교 100주년
행사에서 자랑스런 졸
업생상을 받았다. 장회
우는 2004년 모교인 전
주신흥고 110주년기념식에서 자랑스
런 신형인으로 선정된바 있다. 계엄령
하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실상을 최초
로 보도하고 서도장씨 족보와 가장력

을 한글로 만들어 국내17개 도서관과
세계12개 유수도서관에 비치토록 한
것이 수상이다.

동우회 공로패 받아



조천웅(전 동아일보 편
집국 사진부)회우= 지
난 12월 10일 열린 동
아일보 사우회 정기총
회 겸 송년회에서 디지
털 카메라 강좌를 개설, 이론 강의와
촬영 지도를 맡아온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동우회 몽도상 수상



최희조(전 문화일보 편
집국장·본회 편집위원)
회우= 지난 12월10일
열린 동아일보 사우회
동우회 정기총회겸 송
년회에서 몽도상을 수상했다. 최회우
는 2006년 동우회보 창간과 더불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지금까지
회보발간에 따른 취재 및 특집 기사를
발굴 게재함으로써 동우들 간의 우애
증진과 동우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몽도상은 작고
한 이동수 동우회 초대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유족이 회사한 기금으로 연말
총회 때마다 동우회 발전에 힘쓴 동
우들을 대상으로 주어진다. 상금은
100만원.

김충한 회우 석탑훈장받아

지난 12월 5일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김충한회우(전 한
국일보 부사장·현 한국이엔엑
스회장)가 석탑 훈장을 받았다.
김 회우는 1973년 민간전시주
최자로는 처음으로 한국섬유기
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전시산업
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이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
공업 부문 육성에 맞춰 공장기계전시회
(KIMAT)·인쇄기계전·용접기기
전·의료기기전·교육과학기기전·플라
스틱·고무산업전·방송장비전 등 12개
의 핵심기간산업 분야의 전문전시회를
개발해 국가 산업발전과 전시산업 보급
에 힘 써 왔다. 김 회우는 특히 세계 6
대 전시회인 의료기기·병원설비전
(KIMES), 방송 분야의 세계 5대 전시
회인 방송·음향·조명기기전(KOBA),



플라 스틱·고무 산업 전
(KOPLAS), 인쇄산업대전
(KIPES) 등 다수의 전시회를
국제화·대형화·전문화시켜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앞장섰
다. 또한 세계전시산업협회
(UFI)에 국내 최초로 민간주최자로서
정회원에 가입했고, UFI로부터 4개의
국제인증전시회를 획득하는 등 전시회
의 국제적인 위상정립과 국내전시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또 해외바이어 유치에도 적극
나섰으며, 우수 국산제품 등을 소개해
수출 진흥을 이끌었다.
김 회우는 현재 무역규모 2조 달러 시
대에 대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전
시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시
사업자를 육성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
고 있다.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김재근 회우= ☎ 010-9302-2576
김용발 회우= 서울 송파구 송파동 132-15 주암하우스 201호 010-5106-3999
박영길 회우= ☎ 010-3236-1506
이 형 회우= ☎ 010-3787-9367
정준창 회우= 서울 은평구 통일로 796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아파트 103-301
☎ 010-2432-9933
조천웅 회우 = 은평구 25 삼성래미안 920-302 ☎ 011-418-607

▶ 인사발령 ◀

오건환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회우= 대한언론 편집위원 위촉(2012년 10월 1일자)

임병학회우 별세

임병학 회우가 지난 12월
9일 타계했다. 향년 74세.
12월 10일 서울대 병원 장
례식장에서 발인했다.
고인은 1939년 2월 15일
서울 출생으로 경동고과 성



균관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언론계에는 1965년 조선일보
교열부를 시작으로 교열부차
장, 부장, 편집위원, 스포츠
조선 교열부장, 부국장대우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4]

회우수첩 새로 만듭니다

2013년도 회우수첩을 새로 제작중입니다. 회우 여러분의 신상변동사항을 1월 20
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약력(3가지 이내), 주택주소, 전화번호
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등 기재바랍니다.

○... 보낼곳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이메일 kjc1405@hanmail.net 전화 732-4798 팩스 730-1270

저술문고 보내주신 분

장두원 회우= ‘서도장씨 행재공과 가첩 가장록’ (도서관 기증용·2012.7.12)
‘언론 그 일그러진 자화상’ (2008년 11월·정은출판사)
조강환 회우= ‘세계사에 빛나는 한국인 영웅’ (2012년 11월·기운센 발행)
한영탁 회우= Uli Franz wj ‘周恩來 전기’ (번역판 1989년·시사영어사 발행)
하인리 하러 저 ‘티베트에서의 7년’ (번역판 1989년·수문출판사)
Steers, shin, ungson 공저 ‘한국의 재벌’ (번역판 1990년·시사영어사 발행)
나다니엘 필브릭 저 ‘바다 한가운데서’ (번역판 2001년·중심 발행)
사이먼 리브 지음 ‘새로운 전쟁’ (번역판 2001년·중심발행)
나다니엘 필브릭저 ‘고래의복수’ (번역판 2005년·중심 발행)

찬조금 보내주신분 감사합니다

이혜복 본회 고문 20만원(못 다한 이야기 제2집 출판기념회)
손기상 회우 20만원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가나다순 괄호안 납입연도)

강승훈(13)	박 실(13)	이원창(12)	정일화(13)
강진형(12)	박영길(11,12)	이종기(13)	지용우(12,13)
계성일(13)	박용운(12,13)	이종문(11,12)	최병요(13)
고학용(12)	박중서(13)	이종준(13)	최상목(13)
구월환(11,12)	박준구(13)	이태영(13)	최신호(13)
권혁만(12)	백환기(13)	이학주(13)	한광희(13)
김경래(12,13)	서병주(13)	이 형(12)	한동희(12)
김경태(13)	서진섭(09)	장기효	한영도(12)
김기원(13)	신동식(13)	(12,13,14,15,16	한영섭(12,13)
김길홍(13)	신동철(13)	17,18,19)	홍성혁(13)
김선기(13)	송호빈(13)	장석훈(12)	황대연(13)
김세경(13)	신성순(12,13)	전용호(13)	황원갑(12,13)
김수웅(12)	심의표(13)	정기정(13)	황종건(11,12)
김승웅(10,11,12)	안평선(13)	정두진(13)	
김양섭(13)	양성목(13)		
김영일(12)	오동환(13)		
김영호(13)	오인문(12)		
김원재(13)	오판용(13)		
김재근(13)	유무정(12)		
김준하(12,13)	윤병찬(13)		
김지용(13)	윤석웅(13)		
김진걸(12,13)	윤익한(13)		
김호곤(13)	이광영(13)		
김 화(13)	이구열(13)		
나필성(13)	이남규(9,10,11,12)		
남시욱(13)	이상갑(12)		
류철희(10,11,12)	이성춘		
문준호(11,12)	(9,10,11,12,13)		
박광춘(13)	이순기(13)		
박기정(11,12)	이용화(13)		
박명근 (13)	이우진(13)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8시가 달라졌다

MBC

뉴스데스크

매일 저녁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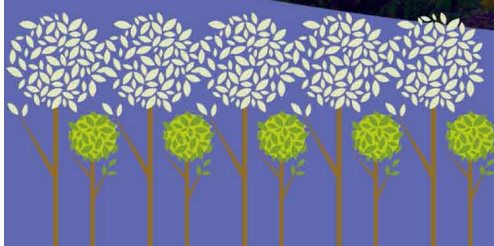
SGI는 대승불교인 니치렌대성인
불법을 기조로 평화·문화·교육 운동을
실천하며 행복이라는 가치를 창조하는
단체입니다.

정답 한국SGI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54
대표전화 1566-1118
www.ksgi.or.kr
신도림역 2번출구

행복을 희망

을 만들어요



언제나 함께하는 한국SGI

